



공정 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85-1
 ☎ 398-3620~2 FAX 398-3630

발행인: 한승호
공보위간사: 김태식

http://www.newsunion.co.kr

‘4대강 살리기’ 특집, 한쪽만 너무 깊이 봤다

공보위, 정부 시각에 지나친 편향 우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10월 개시를 앞두고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한 특집 ‘뺏겨진 4대강’을 마련해 관련 기획기사 8건을 지난 9월 14일 오후 일제히 출고했다.

주지하듯이 이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여러 여건상 무산되자 그 대안으로 선택한 ‘대체 사업 성격’이지만, 이에 대한 찬반 논란 또한 여전히 첨예하고 그 타당성에 대한 논쟁이 엄존한다.

그런 까닭에 이와 관련한 보도, 특히 그것이 이번과 같은 기획특집이라면 ‘정부’가 아닌 ‘국가’의 기간통신사를 표방하는 연합뉴스는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더더욱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집기사는 이런 균형 감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한쪽 시각만을 담으려 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연합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연합뉴스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간사 김태식, 이하 공보위)는 9월 정례회의를 열고 이번 ‘뺏겨진 4대강’ 특집기사가 과연 공정한 보도였는지를 집중 논의했다.

그 결과, 공보위는 이번 특집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측 시각을 지나치게 많이 반영하려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특집은 ‘뺏겨진 4대강’이란 전체 제목 아래 ▲한강이 다시 숨쉰다 ▲수달과 학이 함께 살 남한강 ▲금강 살려 백제문화도 복원 ▲금강 맑게 해 새만금 살린다 ▲영산강, 새로운 ‘젓줄’ 될까 ▲경북 나동강 ‘친환경수계’ 변신 ▲경남권 나동강, 홍수 끝낸다 ▲서부산 나동강 친수공간 기대라는 제하의 개별 기사 8편으로 구성돼 있다.

공보위는 무엇보다 이런 개별 기사 제목 자체가 어느 누구도 그 결과를 선불리 예단하기 힘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장밋빛으로 묘사함으로써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이 사업이 끝난 뒤 한반도의 모습을 낙관적으로 설정하려 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물론 이번 특집은 첫 기사 ‘한강이 다시 숨쉰다’를 통해 이 사업이 ‘아름다운 강, 지역발전 기대’에 대해 ‘환경 파괴’ 논란도 있다는 사실을 함께 다루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일부 소개했다.

하지만 공보위는 이번 특집이 전반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향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시각이 그에 반대되는 시각에 비해 지나치게 적게 다루었다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특집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개별 기사 외에도 그 첫머리에 불

인 ‘편집자주’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공보위는 판단했다.

통상의 연합뉴스 특집에 붙는 ‘편집자주’에 비해 이례적으로 9개 패러그래프에 달하는 장문일 뿐아니라, 그 첫줄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달 10월에 드디어 희망 찬 뜻을 활짝 펼칩니다”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이 ‘편집자주’는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일 뿐”이라는 “평가절하도” 있는 사실을 짚막하게 적시하기는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측 주장, 혹은 ‘청사진’을 인용하면서, “장차 국토의 ‘젓줄’인 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낙후한 강 주변 지역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든가, “무엇보다 부족한 물을 확보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비롯해, “또 수질을 개선해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자연생태를 복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와 같은 홍보성 문안을 지나치게 많이 동원했다.

공보위는 이런 사안에 얼마든지 객관성을 유지하는 특집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한쪽 시각만을 부각하려 한 듯한 이번 특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를 회사 측에 요구키로 했다.

〈4대강 특집기사 목록〉

- ① **한강이 다시 숨쉰다**
남한강 보 3곳, 여주 저류지 2.93㎢ →“홍수걱정 ‘씩’”
“아름다운 강, 지역발전 기대” vs “환경파괴” 논란도
- ② **수달과 학이 함께 살 남한강**
충북권 한강, 금강 38개 사업에 2조 3천억원 투입
생산유발 효과 4조8천억 기대
- ③ **금강 살려 백제문화도 복원**
2011년까지 대전, 충남에 2조5천443억 투입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④ **금강 맑게 해 새만금 살린다**
금강권 공사발주 ‘착착’..2단계 사업 기대감 ‘고조’
4대강 배정예산 2% 불과, “소외됐다” 불만도
- ⑤ **영산강, 새로운 ‘젓줄’ 될까**
총사업비 2조6천억.. ‘로맨틱 리버’로 특화
- ⑥ **경북 나동강 ‘친환경수계’ 변신**
생산유발 12조원, 고용유발 11만명 ‘효과 기대’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 우려도
- ⑦ **경남권 나동강, 홍수 끝낸다**
3조3천억원 투입, 홍수방지, 수질개선, 친환경 생태까지
6조7천억원 생산유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⑧ **서부산 나동강 친수공간 기대**
10개 사업에 8천855억원 투입.. 고품격 자연친화 정비

〈4대강 특집기사 편집자주〉

〈※편집자 주 =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내달 10월에 드디어 희망 찬 뜻을 활짝 펼칩니다.〉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이 사업이 장차 국토의 ‘젓줄’인 강의 생태를 복원하고 낙후한 강 주변 지역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토목공사일 뿐’이라는 평가절하도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토해양부 집행 예산만 16조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가히 ‘단군 이래 최대 역사(役事)’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엄청난 재원을 투입해 무엇보다 부족한 물을 확보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홍수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이달의 참글상

외국인 ‘인종 차별’ 공론화 기사에 참글상

연합뉴스 노조 공보위는 한민족센터 한민족뉴스팀 양태삼 기자의 ‘외국인 ‘인종 차별’ 첫 공론화’ 등 기사 3건을 8월 송고분 참글상 수상작(격려상)으로 선정했다.

공보위는 이 기사가 “내국인들의 외국인 인권 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면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견제나 소외계층 보호에 기여한 기사에 주고 있는 노조의 참글상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편집규약 제정 · · 노사 대표 서명

연합뉴스 노사는 6차에 걸친 실무 협상을 통해 편집위원회 운영을 위한 편집규약을 제정, 9월 21일 양측 대표 서명식을 가졌다.

편집규약은 편집인(편집상무)과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각 5인이내 노사동수 위원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편집위원회는 매월 정례회의를 갖고 △뉴스통신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 훼손 △ 편집 과정에서의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율성 침해 △ 편집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익성 심의 △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과 논란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편집규약에는 편집위원회가 의결로써 시정 및

재발방지를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범위와 회사가 편집권 독립을 위해 윤리헌장과 공정보도준칙의 정신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항목도 포함돼 있다.

편집규약은 또 노동조합 공보위 간사를 전임자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공보위 간사는 필요시 편집국장 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규약은 이와 함께 사원들의 의견 개진권, 이해 당사자 소명 기회 부여, 회의기록 공개, 편집위원 활동 보장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는 조만간 첫 회의를 열고 편집규약에 따른 세칙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규약 제정 일지

- 6. 15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편집규약 제정 제안
- 7. 13 편집규약 협상 노조 실무협상단 구성
- 7. 31 편집규약 제정을 위한 1차 노사 실무협상
- 8. 10 " 2차 "
- 8. 18 " 3차 "
- 8. 26 " 4차 "
- 8. 31 " 5차 "
- 8. 31 공정보도위원회, 협상 중간결과 논의.의견개진
- 9. 1 노조 집행부, "
- 9. 4 편집규약 제정을 위한 6차 노사 실무협상 (공보위.집행부 의견 반영 추가 협상..잠정 합의)
- 9. 8 노조대의원, 편집규약 잠정 합의안 이메일 추진
- 9. 21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 노사 대표 서명

연합뉴스 편집규약(전문)

주식회사 연합뉴스(이하 “회사”라 함)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조합”이라 함)는 연합뉴스의 편집권 독립과 콘텐츠 역량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편집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규약은 편집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편집권의 독립과 수호를 위한 편집위원회의 역할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권 독립)
① 편집권은 편집인이 대표하되 뉴스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논설위원 포함)들이 공유한다.
② 편집권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
③ 회사는 편집권 독립을 위하여 윤리헌장, 공정보도준칙의 정신을 존중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과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포함한 각 5인이내 노사동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양측을 대표하는 각 1인의 간사를 두며, 노조측 간사는 단체협약상 전임자 중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위원회의 운영)
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행한 결정이나 발언 등으로 인해 회사 혹은 조합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기타 편집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제정할 수 있다.

제5조(편집위원회의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1/3 이상 편집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의 회의 안건은 사전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사 협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 회의 안건은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⑥ 사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편집위원에게 개진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직접 편집회의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⑧ 노조측 편집위원 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라 편집국 편집회의에 필요시 참석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기능)
연합뉴스의 공적사명을 다하고 그 독립성과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한다.
1. 뉴스통신의 독립성, 공정성, 공익성 훼손
2. 편집 과정에서의 내부 구성원에 의한 자율성 침해
3. 편집 과정에서의 공정성, 공익성 심의
4. 편집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과 논란 조정
5. 그 밖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의 조치 및 의결 방식)
① 편집위원회는 의결로써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의 의결 방식은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편집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나,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편집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존중한다.

제8조(회의 및 내용 공개 등)
① 편집위원회의 회의 내용과 의결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의결 사항이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해당될 경우에는 사내 공개 이전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해당 부서나 개인에게 직접 통보해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편집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

제10조(적용)
본 규약은 회사와 조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009. 9. 21

연합뉴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노동조합
사장 박정찬 위원장 한승호